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 · 실기 4과목 공공조달 관리실무

제7강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법령 · 분쟁 대응 · 우대제도

법령은 방어 수단이자 무기입니다. 근거를 찾는 법, 분쟁에 대응하는 법,
그리고 우대제도로 수주 기회를 넓히는 법을 다룹니다.

세부항목 3

세세항목 9

화면 실습 10컷

확인문제 10문항

강의 60~90분

공공조달관리사 강의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항목·세세항목 체계에 따라 구성한 강의 자료
법령·제도·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출제기준 수행준거)

"공공조달 법·제도지원 관리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우대제도를 활용하고 분쟁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다."

- 7-1 법령 활용하기 — 법령 구조와 적용범위 이해·설명 / 공고·계약서의 법적 근거 확인과 불리한 조건 대응 / 유권해석·판례로 쟁점 정리
- 7-2 분쟁 대응하기 — 분쟁 원인 파악과 선제 예방 / 분쟁 대응 절차 진행 / 전문가와 협력
- 7-3 우대제도 활용하기 — 우대제도 종류·특징 파악과 적용 / 자격 확보와 서류 준비 / 입찰 전략과 연계

이 강의의 큰 그림



앞의 둘이 지키는 법이라면 마지막은 얻는 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우대제도는 가장 확실한 수주 확대 수단입니다.

① 공공조달 관련 법령의 구조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행준거

공공조달 관련 법령의 구조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법령의 수직 구조 — 위에서 아래로



💡 실무자가 실제로 보는 곳

법률 조문보다 **계약예규(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고시·지침**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격심사 기준, 물가변동 조정 방법 등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주** 개정됩니다.

적용범위 — 누가 발주하느냐로 갈린다

발주 주체	적용 법령
국가기관	국가계약법 + 시행령·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 기관별 계약사무규칙(국가계약법 준용이 많음)

⚠ "국가계약법대로 하면 되겠지"가 사고를 부른다

같은 물품이라도 **지자체 입찰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 낙찰자 결정방법이나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법령 정보를 찾는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부칙·개정 이력**을 확인하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기준과 해석 자료**를 함께 봅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page features a search bar at the top with the text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and a "검색"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tabs for different types of legislation: "기판별 찾기", "법분야별 찾기", "최신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한눈보기", and "이벤트". The "최신법령" tab is currently selected, showing a list of recent legislation. The list includes the "지방계약법" (Local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the "국립중앙도서관법" (National Central Library Act). The page also includes a sidebar with "이벤트" (Events) and "이벤트 시연법령" (Event Demonstration Legislation) sections. At the bottom, there is a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copyright notice.

공공조달 법규 활용 (1)

The screenshot shows th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Act on Contracts with the State) page on the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The page displays a table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table has columns for "번호" (Number), "법령명" (Law Name), "공포일자" (Enactment Date), "법령종류" (Law Type), "공포번호" (Enactment Number), "시행일자" (Effective Date), "제정·개정·폐지" (Enactment, Amendment, or Abolition), and "소관부처" (Responsible Ministry). The table lists several laws related to contracts with the state, including th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Act on Contracts with the State) and th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gulations on Contracts with the State).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폐지	소관부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4. 3. 26.	법률	제20401호	2024. 9. 27.	일부개정	조달청 기획재정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조달청 기획재정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조달청 기획재정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3. 8. 16.	법률	제19634호	2024. 2.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8.	행정안전부령	제569호	2025. 8.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공조달 법규 활용 (2)



- **시행일** — 개정된 조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이 적용된다.
- **부칙** — 경과규정이 있으면 **기존 계약에는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공고·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

수행준거

공고 및 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

공고문과 계약서의 조항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요구나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은 다룰 수 있습니다.

유형	예시	대응
과도한 자격 제한	특정 업체만 충족 가능한 실적·인증 요구	사전규격공개 의견 제출(제2강), 공고 후에는 이의신청
부당한 책임 전가	발주기관 귀책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	근거 조문을 들어 계약 체결 전 이의
법령 위반 특수조건	법정 조정 사유를 배제하는 조항	법령이 우선하므로 효력을 다룰 수 있음
불명확한 조항	"필요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등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질의·회신 기록 확보

💡 가장 강력한 대응 도구는 "질의"다

공고 기간에는 **질의응답 절차**가 열립니다. 모호한 조항에 대해 질의하면 발주기관의 **공식 회신**이 남고, 그 회신은 이후 분쟁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물어보면 찍힐까 봐"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 서명하면 다투기 어려워진다

불리한 조건은 **계약 체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고 이행에 들어간 뒤에 "그 조항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훨씬 불리합니다. 제4강에서 강조한 **특수조건 정독**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③ 유권해석·판례를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수행준거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자료	성격	활용
유권해석	소관 부처가 조문의 의미를 밝힌 것	해석이 갈리는 조항의 실무 기준 으로 활용
질의회신	개별 사안에 대한 기관의 답변	유사 사안의 참고 .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를 수 있음
판례	법원의 확정된 판단	가장 강한 근거. 쟁점의 결론을 예측 하는 데 활용

💡 쟁점 정리의 3단 구성

실무에서 쟁점을 정리할 때는 ① **사실관계** → ② **적용 법령·근거** → ③ **우리 주장과 상대 주장** 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내부 보고도, 전문가 자문도, 발주기관 협의도 훨씬 빨라집니다.

① 주요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수행준거

주요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분쟁 원인	언제 씨앗이 뿌려지는가	예방
과업 범위	협상·계약 단계의 모호한 기술(제3강)	범위·산출물·검수 기준을 문서로 확정
설계변경·추가공사	구두 지시로 먼저 작업(제5강)	지시 문서 확보 후 변경계약
공기 지연	책임 소재를 기록하지 않음(제4강)	지연 사유·귀책을 그때그때 공문화
검수 불합격	검수 기준이 주관적	객관적 기준 사전 합의, 중간 확인
대금 미지급	청구 서류 미비	요건 확인 후 청구, 기록 보관
하도급	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제5강)	서면 계약과 기한 내 지급

💡 분쟁 예방의 유일한 원칙

이 표의 예방 항목을 한 줄로 줄이면 "기록"입니다. 공공조달의 분쟁은 대부분 "그때 그렇게 합의했다"를 증명할 수 있느냐로 결판납니다. 말로 한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②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행준거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은 가벼운 수단에서 무거운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갑니다.



단계	특징	고려할 점
협의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다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이의신청	발주기관에 공식 문제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분쟁조정	중립적 기구를 통한 조정	소송보다 빠르고 관계 손상이 적다
소송·중재	최종적 해결	시간·비용이 크고 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

⚠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이의신청과 조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협의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다 기한이 지나면 정당한 주장도 절차적으로 막힙니다. 분쟁이 감지되면 가장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실무적 판단 — 이길 수 있어도 안 가는 경우

소송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향후 거래관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럼 법적 지위가 걸린 사안은 다릅니다. 제재는 향후 모든 입찰에 영향을 주므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합니다(제6강).

③ 법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수행준거

법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가에게 넘기기 전에 실무자가 준비할 것

- 시간순 사실관계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 근거 자료 목록 — 계약서, 공문, 회의록, 시스템 기록
- 쟁점 정리 — 7-1③의 3단 구성
- 원하는 결과 — 금액인지, 기간 연장인지, 제재 취소인지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자문 시간이 크게 줄고 결과의 질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사실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깁니다.

① 우대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 후 입찰에 적용할 수 있다

수행준거

우대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 후 입찰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조달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제품에 유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경쟁 구도가 통째로 바뀝니다.**

제도 축	내용
중소기업 판로지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해당 제품은 중소기업만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등 — 근거는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NEP·NET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녹색·환경	녹색제품 의무구매, 환경표지·GR 인증 등
사회적 가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혁신·창업	혁신제품(혁신장터), 창업기업 제품(벤처나라) 등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중소기업 판로지원)

중소기업 관련 우대제도의 중심 창구입니다.

기술개발제품 검색

과 기관별

구매목표·구매실적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인증구분

- ☐ 성능인증
 ☐ NET
 ☐ 혁신시제품
 ☐ 산업융합품목
 ☐ 재난안전제품인증
 ☐ 공공기관 개발선행품
- ☐ 우수조달물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 기타혁신제품
 ☐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 우수산업디자인(GD)
- ☐ NEP
 ☐ 물산업우수제품 등 지정
 ☐ 녹색기술제품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ICT융합품질인증
- ☐ GS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 성과공유기술개발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세부품명번호

☐ 인증기간 만료업체 포함 ☐ e-카탈로그

주소 시도 시군구

인증정보(세부품명, 인증제품명)

검색

초기화

전체 17554개

15개

선택

No	제품사진	인증구분	인증정보	회사정보	인증일자	만료일자
1		NET	유해성 저감 연포장재 인증번호 : ATP-25-00340	업체명 : (주)신명이노텍 대표자 : 주 소 :	2025-09-11	2029-09-10
2		NET	VOCs 처리 시스템 공정을 통한 연포장재 제조 기술 인증번호 : AT-25-00346	업체명 : (주)신명이노텍 대표자 : 주 소 :	2025-09-11	2029-09-10

기술개발제품 검색

💡 구매목표·구매실적 조회가 곧 영업 정보다

기관별로 구매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실적이 공개됩니다.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 제품을 사야 하는 유인이 큼니다. 제2강의 타깃 선정과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접근 근거가 됩니다.



연도별 구매목표 상세조회

글씨크기

기준년도 2025년

기관검색



전체

☒ 전체선택 ☐ 총괄포함

☒ 총구매	☒ 합계(A) ☐ 물품 ☐ 공사 ☐ 용역
☒ 중소기업구매	☒ 합계(B) ☐ 물품(C)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B/A)
☒ 기술개발제품	☒ 구매액(D) ☐ 구매비율(D/C)
☒ 여성기업구매	☒ 합계(E) ☐ 물품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E/A)
☒ 장애인기업구매	☒ 합계(F) ☐ 물품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F/A)
☒ 창업기업제품	☒ 합계(G) ☐ 물품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G/A)

(단위 : 백만원)

* 당해년도 구매목표 및 이전년도 구매실적 정보는 4월 국무회의보고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기관구분	총구매	중소기업구매		기술개발제품구매(D)	여성기업구매		장애인기업구매		창업기업구매	
	합계(A)	합계(B)	비율(B/A)	구매액	합계(E)	비율(E/A)	합계(F)	비율(F/A)	합계(G)	비율(G/A)
공기업	35,912,518	26,101,438	72.7%	1,157,438	1,584,204	4.4%	391,299	1.1%	1,359,474	3.8%
광역자치체	12,861,895	9,786,689	76.1%	553,595	1,445,549	11.2%	229,052	1.8%	1,100,881	8.6%
교육행정기관	16,572,881	13,697,305	82.6%	790,635	1,792,817	10.8%	289,114	1.7%	1,346,892	8.1%
국가기관	26,436,719	16,532,822	62.5%	1,331,170	1,453,419	5.5%	310,626	1.2%	1,864,500	7.1%

우선구매 · 구매목표



01. 연도별 구매목표 상세조회

02. 연도별 구매목표 역셀다운

03. 연도별 구매실적 상세조회

04. 연도별 구매실적 역셀다운

연도별 구매실적 상세조회

글씨크기 + - ↺ ⌂

기준년도 2024년

기관검색



전체

☒ 전체선택 ☐ 총괄포함

☒ 총구매	☒ 합계(A) ☐ 물품 ☐ 공사 ☐ 용역
☒ 중소기업구매	☒ 합계(B) ☐ 물품(C)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B/A)
☒ 기술개발제품	☒ 구매액(D) ☒ 구매비율(D/C)
☒ 여성기업구매	☒ 합계(E) ☐ 물품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E/A)
☒ 장애인기업구매	☒ 합계(F) ☐ 물품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F/A)
☒ 장애인기업제품	☒ 합계(G) ☐ 물품 ☐ 공사 ☐ 용역 ☒ 구매비율(G/A)

(단위 : 백만원)

◆ 당해년도 구매목표 및 이전년도 구매실적 정보는 4월 국무회의보고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기관구분	총구매	중소기업구매		기술개발제품구매(D)		여성기업구매		장애인기업구매		장애인기업제품	
	합계(A)	합계(B)	비율(B/A)	구매액	비율(D/C)	합계(E)	비율(E/A)	합계(F)	비율(F/A)	합계(G)	비율(G/A)
공기업	36,145,555	25,342,160	70.1%	1,173,390	17.7%	2,159,498	6.0%	422,761	1.2%	767,730	2.1%
광역자치단체	12,779,253	9,215,767	72.1%	520,589	19.7%	1,486,493	11.6%	221,193	1.7%	353,010	2.8%
교육행정기관	19,265,457	16,470,852	85.5%	766,252	15.2%	2,769,943	14.4%	378,272	2.0%	805,354	4.2%
국가기관	30,637,850	20,562,982	67.1%	810,773	12.7%	2,275,852	7.4%	414,931	1.4%	636,603	2.1%

우선구매 · 구매실적

4

분야별 전용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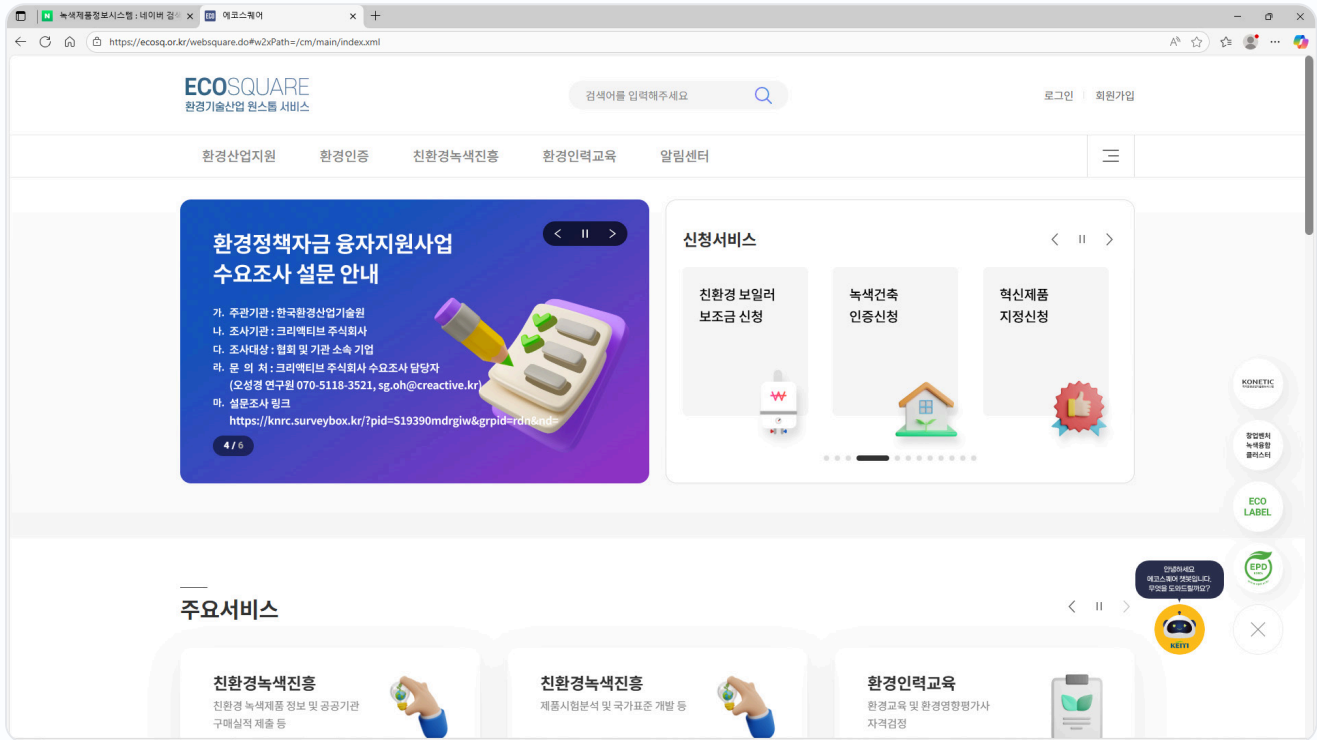
환경·녹색은

에코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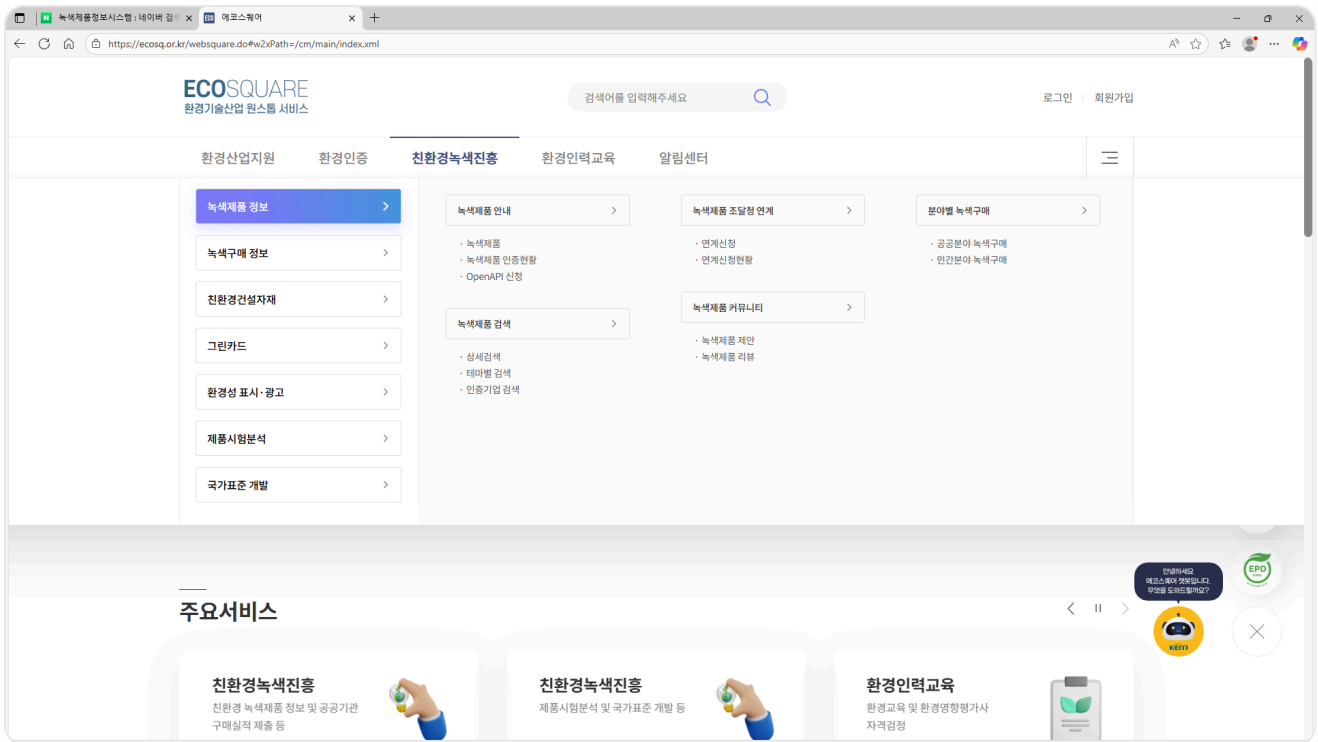
와 녹색제품 정보, 여성기업 등은

전용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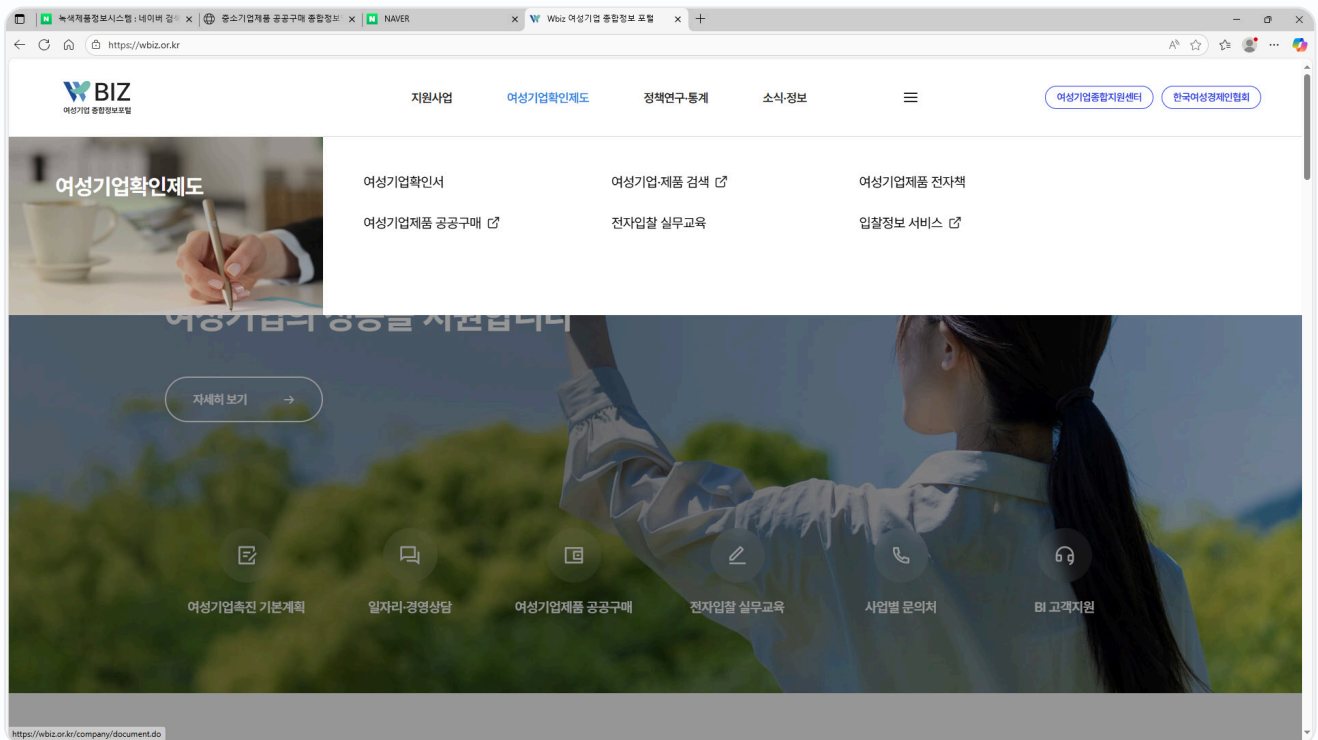
을 통해 정보와 판로가 제공됩니다.



에코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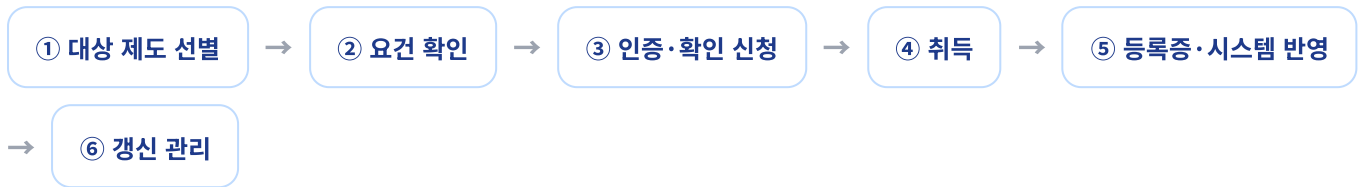
녹색제품 정보



여성기업 종합포털

② 우대제도 자격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수행준거 우대제도 자격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 인증은 "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료된 줄 모르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가점을 못 받거나 자격 미달**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인증별 만료일을 한 표로 관리하고 **갱신 시점을 미리 알림**으로 걸어 두세요.

💡 취득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한다

인증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전부 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력 품목의 입찰에서 실제로 **배점이 걸린 것**부터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강에서 배운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는가"** 분석이 그대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③ 우대제도를 입찰 전략과 연계해 수주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

수행준거

우대제도를 입찰 전략과 연계해 수주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

연계 방식	효과
경쟁 자체를 줄인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 — 경쟁 구도가 바뀐다
수의계약 경로를 연다	우수제품·혁신제품 등은 가격 경쟁 없이 판로가 열릴 수 있다
점수를 올린다	적격심사·종합심사의 신인도 가점
타깃을 정한다	구매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한 기관을 우선 공략

✅ 우대제도 활용의 사고 순서

- 우리 제품이 **어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 그 자격을 얻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한다.
- 자격 취득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한다(구매목표·전용물 등).
-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취득한다.
- 취득 후에는 **등록증·시스템에 반영**하고 만료일을 관리한다.

🔊 발표자 노트 — 20분, 수강생 관심 최고 구간

- 우대제도는 수강생이 **가장 즉각적인 이익을 느끼는 주제**입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처럼 기업 속성 기반 제도와, **기술개발제품·녹색제품**처럼 제품 속성 기반 제도를 나눠서 설명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 구매목표 대비 실적 조회는 **화면을 실제로 띄워 보여 주면**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할 프레임

법률→시행령→규칙→예규

실무 답은 대개 맨 아래 예규에 있다

국가 vs 지방

발주 주체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다

시행일·부칙

개정 조문 확인 시 반드시 함께 본다

4단계

협의 → 이의신청 → 분쟁조정 → 소송·중재

기록

분쟁의 승패는 증명 가능성에서 갈린다

기업 속성 vs 제품 속성

우대제도를 나누는 두 축

☑ **이것만은 반드시**

- 실무의 답은 법률보다 **계약예규·고시·지침**에 있고, 그것들은 자주 개정된다.
- 공고문에서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모호한 조항은 **공고 기간 질의**로 공식 회신을 받아 둔다.
- 불리한 조건은 **서명 전에** 제기해야 한다.
- 분쟁 대응은 **가벼운 수단부터**. 단,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제재처럼 법적 지위가 걸린 사안**은 비용을 감수하고 적극 대응한다.
- 우대제도는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수주 확대 수단이다.
- 인증은 **유지·갱신 관리**가 취득만큼 중요하다.

 제7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0문항

Q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정답 ② — 발주 주체에 따라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지자체 입찰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실무에서 자주 참조하는 기준이 주로 담기는 곳은?

헌법

법률 본문

민법 총칙

계약예규·고시·지침

정답 ④ — 구체적 기준은 대개 **계약예규·고시·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위가 **가장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개정된 법령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시행일과 부칙(경과규정)

제안 이유와 입법 예고

목차와 색인

조문 번호와 글자 수

정답 ① — **시행일**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계약에는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공고문의 모호한 조항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리하게 해석해 제안서를 작성한다.

낙찰 후 계약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공고 기간의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공식 회신을 받아 둔다.

경쟁사에 문의해 해석을 맞춘다.

정답 ③ — 발주기관의 **공식 회신**은 이후 분쟁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찍힐까 봐" 질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Q5. 계약서의 불리한 조건에 대한 대응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행이 상당히 진행된 후 실제 손해가 확인되었을 때

계약 체결 전, 서명하기 전에

준공 및 대금 청구 시점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정답 ② — 서명 후에는 다투기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제4강에서 강조한 **특수조건 정독**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Q6. 분쟁 해결 절차를 일반적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협의를 → 이의신청 → 분쟁조정 → 소송·중재

소송 → 협의 → 이의신청 → 분쟁조정

이의신청 → 소송 → 협의 → 분쟁조정

분쟁조정 → 협의 → 소송 → 이의신청

정답 ① — 가벼운 수단에서 무거운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Q7. 분쟁이 감지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재무 상태

변호사 선임 비용

이의신청·조정 신청의 기한

언론 대응 방안

정답 ③ —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주장도 절차적으로 막힙니다.** "일단 협의해 보자"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8. 소송보다 조정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분쟁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향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신속한 해결이 중요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럼 법적 지위가 걸린 경우

정답 ④ — 제재는 **향후 모든 입찰에 영향**을 주므로 비용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Q9. 기관별 구매목표와 구매실적 조회가 영업에 유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관의 예산 총액을 알 수 있기 때문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크기 때문

낙찰 가격이 공개되기 때문

경쟁사의 인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

정답 ② —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구매 유인이 큼**니다. 제2강의 타깃 선정과 결합하면 강력한 접근 근거가 됩니다.

Q10. 우대제도 자격 취득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취득 가능한 모든 인증을 우선 확보한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인증부터 확보한다.

주력 품목 입찰에서 실제 배점이 걸린 인증부터 확보한다.

경쟁사가 보유하지 않은 인증부터 확보한다.

정답 ③ — 인증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제3강의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는가**" 분석이 그대로 취득 우선순위가 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강의 · 실기 4과목 공공조달 관리실무 · 제7강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항목·세세항목 체계를 따라 구성한 강의 자료입니다.

법령·제도·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강의 및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